

일관된 개악 저지 입장, 9년 만에 연가 투쟁, 쓰라린 패배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교훈과 과제

정원석(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장)

[5월 28일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교조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투쟁했지만, 공무원연금 투쟁은 결국 패배로 끝났다. 많은 전교조 활동가들은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배신적 타협과 5월 중요한 순간에 보여 준 민주노총의 모순과 동요에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단지 '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투쟁을 평가한다면 다음 투쟁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년여 투쟁을 평가하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정리하는 것이다. — 편집자 주]

### 여야 야합으로 통과시킨 개악안을 결산해 보자

통과된 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더 내고 덜 받는 것만 따져도 최대 1억 6천만 원을 손해 본다. 기여금 납부 기한을 36년까지 늘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늦췄다. 이렇게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것까지 합한다면 족히 집 한 채 값이 넘는다.

유족연금도 10퍼센트 삭감했고, 모든 퇴직자들의 연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연금 수급 요건을 조정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개악이 이뤄졌다.

정부·여당은 재정 적자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노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겼다. 그 결과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70년간 3백33조 원의 생계비를 빼앗기게 됐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공적 연금을 하향 평준화했다. 여당 측 인사인 김용하 교수의 말에 따르면, 민간 노동자에 비해 더 내는 기여금과 적게 받는 퇴직수당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국민연금의 지급률과 사실상 같아진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1.48)는 국민연금(1.5)보다 더 나빠졌다.

세대 간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재직자, 신규, 퇴직자 모두 희생을 떠안도록 하는 한편, 특히 미래 노동자들의 연금을 가장 많이 깎았다. 2016년 임용 예정인 9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후 1백3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돈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말은 완전 사기였다.

##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그토록 붙들고 늘어진 이유 — 박근혜의 연금 정치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더 사악한 박근혜 정부의 탄생 자체가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의 의지와 절박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보수 세력은 1997년 대선 이래 처음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박근혜를 지지했다.

이에 보답하듯, 박근혜 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주는데도 부자와 기업주의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주들의)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3년간 세수 결손에다가 국가 채무는 5백조 원이 넘었다. 재정 적자 증가가 국가와 기업에 부담을 줄까 봐 지배자들은 복지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공격 등을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 공격을 전체 노동계급을 공격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았다. 즉, 공무원연금 개악을 “동력” 삼아 공공부문이라는 “킹핀”을 쓰러뜨리고 전체 노동계급을 상대로 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려 한다.

그래서 지배자들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은 연금 재정 부족액 3조 원이라는 액수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고통전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잘 조직된 대형 노조를 꺾을 수 있다면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저항 기세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 박근혜의 공격 수단들 — 이데올로기, 노조 불인정 공격, 사회적 합의 기구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해 공무원연금을 공격했다. 첫째,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었다. 복지 제도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노후를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은 “비정상”적 특혜라고 공격하기 쉬운 먹잇감이었다. 정부·여당은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교사·공무원 노동자들과 나머지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게 될 거라며 세대 간 분열도 부추겼다. 이간질과 각개격파는 지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지배 전략이다.

둘째, 공무원연금 공격을 포함해 공공·교육 서비스를 공격하기 위한 포석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규약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노동조합 불인정 공격을 가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축시키거나 내부 분열을 촉발하려는 의도였다.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쳐 놓은 야비한 사기 그물망에 걸려 2013년 규약을 개정했지만 노조 설립 신고는 끝내 반려됐다. 좌파 지도부하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 바람에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상당한 사기저하를 겪었다. 반면, 전교조는 규

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을 선택했다. 이런 차이는 이후 공무원연금 전투에서 두 노조의 상이한 선택으로 이어졌다.

셋째, 대타협기구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노조 지도자들을 포섭하려 했다. 애당초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당사자 배제 원칙을 정했다. 그런데 11월 1일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 계획을 규탄하자 대타협기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대타협기구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긴 했지만, 그 기구의 주된 목적은 노조 지도자들을 교섭 테이블에 앉혀 투쟁의 김을 빼고 사회적 합의의 모양새를 갖춰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었다. 즉, 노동자들의 양보를 관철시키는 게 그 기구의 핵심 목적이었다.

## 개악을 저지할 수 있는 투쟁 잠재력과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일 집회는 12만 명의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모여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이후 공무원 노동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 총파업 및 연가 파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퍼센트에 달했다. 지도부가 투쟁을 호소하면 조합원들 다수가 이에 응할 태세가 돼 있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발표된 후 국회 토론회와 정부의 지역별 공청회는 조합원들의 항의 행동으로 무산됐다. 2월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는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충재 전 집행부는 이런 총만한 투쟁 잠재력을 투쟁으로 발현시키지 않고 양보 교섭으로 일관하다 최종 배신적 타협을 했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에 비해 시동이 늦게 걸렸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같은 '돈 문제'로 싸워 본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 '돈 문제'로 싸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적잖았다. 그래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하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노조에 위임하자는 생각들이 암암리에 회자됐다.

11월 1일 집회는 전교조에게도 일종의 전환점이 됐다. 집회 규모와 참가자들의 분노는 소규모로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줬다. <별떡교사들>이 연초부터 주장해 왔던 연금 투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이제 수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계기였다. 이런 변화가 지도부 선거에도 반영됐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연가 투쟁을 하겠다고 공약한 변성호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연금 투쟁 동력을 바짝 끌어올려 9년 만에 연가 투쟁을 성사시켰다. 전교조 지도부는 투쟁의 원칙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아 연금 투쟁의 퇴적물을 남겼다.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4월 파업을 조직했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이 4월 파업에 동참하기를 회피하고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이 '억지 파업'이라며 집단적 결정을 제멋대로 무시해 김을 빼긴 했지만, 그럼에도 4.24 파업을 배치한 덕분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재등장과 성완중 게이트로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주변적인 존재로 밀려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나쁘지 않은 정치적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들어오자마자 청와대 실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윤희 문건 파문,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4월에 세월호 항의 투쟁이 재점화되고 성완중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분열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4.24 파업 집회를 분산 개최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집중시켰다면 정치적 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5월 들어 민주노총 내에서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이 득세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지 못하고 모순과 동요를 겪은 것은 큰 아쉬움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어떻게 패배하게 됐는가?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 잡힌 평가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지만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여러 차례 시기를 늦추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4년 연내 처리를 다짐했지만 해를 넘겼고, 4월 임시국회에서도 불발이 돼 5월 국회에서야 처리할 수 있었다. 또,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을 의식해 대타협기구 등 사회적 합의 모양새를 갖추야 했다.

만약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4일 파업을 벌였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파업으로 지배계급의 연금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까지는 어려웠을지라도, 정치적 휘발성이 강했던 4~5월 정세에서 공무원노조가 실질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면 정부도 큰 압력을 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 편의 5월 국회 대응에 기동의 여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해서 졌다기보다는 우리 편 내 약점과 실수, 특히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배신을 패배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공무원연금 당사자 단체들이 중심이 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대표자들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아니라 상층 협상에 매달렸다. 이들은 11월 1일 대규모 집회 이후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압력으로 이용했다. 공투본은 명칭도 '공적 연금 개악 저지'에서 '공적 연금 강화'로 바꿨다. 임박한 정부의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그리고 12월 초 공투본이 제시한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은 일부 양보를 암시하는 내용들을 포함했다.

12월 말 여야가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구성하자 전교조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자들(공무원노조·교총·공노총)은 개악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다. 그리고 5월 2일 최종 연금 개악에 배신적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은 관료적 책략을 부리며 연금 투쟁, 특히 공무원노조의 투쟁 조직을 교란하거나 방해했다. 이충재 전 위원장은 말로는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주장했지만, 실천에서는 양보 교섭을 중시했다. 이 대목에서 이른바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화전양면은 본디 전(前)자본주의에서 지도자가 상대 편을 속이기 위해 구사한 전술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운동의 핵심 특징과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 운동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압도 다수의 이익을 위한 압도 다수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의 책략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운동과 활동, 즉 민주주의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말해 놓고 투쟁이 아니라 양보 교섭 중시 실천을 한 이충재 전 위원장이 최후의 순간에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다.

아무튼 투쟁 조직을 회피하고 협상 중시 전술을 택한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었다. 이충재 전 위원장의 배신적 말로(末路)가 보여 줬듯이, 개약을 막아낼 실질적 힘은 지도자들의 협상 기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이충재 전 위원장을 위시한 대다수 공투본 대표자들은 공무원연금 개약에 찬성하는 새정치연합에 기댔다. 지난해 11월 9일 공투본은 새정치연합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합리적인 개혁[개약]에 동참한다”고 합의했다.

이충재 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보안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충재 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기회주의적 입장을 공개 비판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견제론은 결코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여야가 동수로 대타협기구 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하고 주장해, 공무원연금 개약과 관련해 야당이 여당과는 다른 입장인 것처럼 치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처음부터 개약에 반대한 적이 없다. 대타협기구에서도 자체 안을 내면서 공무원노조에 양보를 요구했다. 개약 처리가 끝나자마자 “약속대로, 국민의 뜻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해냈다"면서 자신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의 일동공신이라고 자랑했다. 이들을 믿고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전장에 뛰어드는 꼴이었다.

정규직 양보론(공무원연금 관련해서는 '사회연대전략'으로 표현됐다)도 이 투쟁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충재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선과 공무원연금 삭감을 맞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올려 실제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도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공적 연금 강화 약속은 공무원 단체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 청와대는 인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해 펄펄 뛰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삭감을 확정하자 '50%로 인상'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이자 '50%로 인상'을 반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안면 몰수에 방방 뜨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한 발 두 발 물러섰다.

그런데 5.2 여야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진보 진영 내에서도 '공무원연금 일부 양보하고 공적 연금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연금 투쟁 전선이 교란됐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온건한 개혁주의 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을 환영했다. '공적 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비판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해 투쟁 전선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락가락하며 투쟁의 중심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견해들은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것이 전체 노동계급 입장에서 보면 좋다는 것이다. 형편이 좀 나은 노동자가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자기 것의 일부를 내놓아 서로 연대를 돈독하게 하자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추상적 도덕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회연대전략'이 공상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양보의 대상은 다른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라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는 '월권', '1702조 원 세금 폭탄', '세대 간 도적질' 운운하며 국민연금 개선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절감한 재정 중 20%를 공적 연금 개선에 사용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와 기업주의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강력한 투쟁으로 지배자들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 등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투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사용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거나 '투쟁으로 개악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다'는 식의 비관주의적 태도가 투쟁 회피와 양보론으로 귀결된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주에게 양보하기 위해 투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투쟁을 회피하려는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연대전략'을 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연대전략'은 양보해야 하는 노동자와 시혜의 대상이 된 노동자 사이에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 되면 투쟁 속의 단결은 더 요원해질 것이고, 이것은 정부와 사용자의 공격을 막는 데서 더한층의 장애가 될 것이다.

## 전교조의 연금 전투 — 무엇을 남겼는가?

그동안 전교조 내에 돈 문제로 싸우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연금 투쟁을 계기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쟁과 교사들의 노동조건 방어 투쟁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경험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지방 교육 재정 삭감, 성과급, 임금피크제 등 같은 교육 공격들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공동 투쟁을 벌인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4월 파업의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내건 민주노총 파업 계획을 놓고 의제와 시기 등에 대해 적잖은 이견들이 있었다. 이때 전교조의 4.24 연가 투쟁 결정은 민주노총이 4.24 파업을 결정하고 조직하는 데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면서 원칙 있게 투쟁을 조직해 왔다. 또, 공무원노조 이충재 집행부가 배신적 타협을 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박 3일 농성을 했다. 이것은 이번 개악이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야가 야합을 사회적 합의안이라고 치켜세우는 사기극을 벌이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또,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한 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의 모순이 감춰질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주 언론들은 이번 개악을 '거북이 개혁'이라는 등 '맹탕 개혁'이라는 등 해 가며 '5년 뒤 또 개악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주문하고 있다. 이번 전투를 원칙 있게 치른 경험에서 교훈을 잘 이끌어 낸다면 다음 전투를 더욱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 단체 대표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양보하면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인사정책 협의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이 기구를 보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마음이 복잡할 것 같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속이 왕창 쓰리면서도 이왕 공무원연금이 삭감됐으니 인사정책 협의 기구를 통해 벌충하자는 보상 심리도 있을 것 같다.

이충재 전 위원장처럼 이 기구를 대단한 성과라고 포장하는 것은 자신의 협잡을 가리기 위한 언어도단이므로 동의할 수 없지만, 이 기구의 기능은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와 똑같지는 않다.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반면, 인사정책 협의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는 기구다. 그래서 후자 기구에 별충을 바라는 것도 나름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인사정책 협의 기구가 별충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충족시킬 기구가 될지는 요모조모 따져 봐야 한다.

인사정책 협의 기구는 공무원, 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승진 제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런데 재정 적자를 이유로 연금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서 사기진작책을 내놓을까? 게다가 정부가 임금피크제,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급제 전환 등 임금 체계 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인사정책 협의기구에서 그 반대 정책을 논의하려 할까? 두 물음 모두에 대한 답이 '아니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인사정책 협의 기구의 구성을 봐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이다. 이 기구는 정부 대표와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해 운영된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공무원 노동자들보다는 정부 편을 들 공산이 더 크다.(대타협기구 참여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연금 개악에 찬성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고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협상장이다.

또, 이 기구는 논의만 할 뿐이다. 결정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다. 따라서 이 기구의 논의를 정부에 강제할 수가 없다.

가장 나쁘게는, 정부가 정년 후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안을 관철시키려 하는 경우다. 별충하려다 개악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다.

요컨대, 공무원연금을 빼앗긴 마당에 담임수당 등 임금 인상으로라도 별충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의 쓰라린 심정을 정부가 자상하게 헤아려 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악하고 교원 증원 감축, 작은 학교 통폐합, 지방 교육 재정 삭감 등 교육 삭감 공격을 예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추가 공격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 개선 수단이 될 수 있을까?

5월 29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하면서 공적 연금 강화에 관해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 논의가 교차 합의되는 알곳은 상황 때문에, 사회적 기구를 둘러싸고 날 선 논쟁이 있는 듯하다.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사후 승인하는 효과를 낼 거라는 원칙 있는 입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어깃장 때문에 크게 열그러지긴 했어도 사회적 기구의 목적이 공적 연금 개선 논의이니 노동자 대표들이 그 기구 안에 들어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광범하다.

물론 사회적 기구는 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처럼 개악을 위한 기구는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개선에 조금치도 관심 없으며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 5월 2일 여야 합의문에 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은 최종 빠졌고,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정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히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당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여당의 비토에 단단하게 저항하리라 믿기 어렵다.

연금 투쟁의 핵심 동력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막 패배를 겪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선 논의 합의를 '없던 일로 돌리기 전략'으로 일관할 정부·여당에 맞설 장외 투쟁

동력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구에 노동자 보험료 인상 없는 국민연금의 실질적 개선을 논의하라고 강제할 힘이 장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선 논의가 상당 부분 사회적 기구 내 논쟁으로 한정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구 내 지형은 어떤가?

사회적 기구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각각 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 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씩 지명하고 공동으로 전문가 2명, 관계 공무원 2명을 추천키로 했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나마 대변할 사람은 1명(민주노총이 참여한다면)이거나 많아도 5명을 넘기기 어렵다.

또, 사회적 기구는 논의만 하고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한다. 그것도 고작 다섯 달만 운영된다. 10월까지 시간을 끝다가 유아무야 끝내고 먹튀 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논의에 참여한다면 공무원연금 삭감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필두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악하고 국민연금도 손 볼 계획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지배자들의 공세를 저지하고 양보를 강제하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